

1988년도 기준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9. 12



국토통일원

차 례

①. 남북한 경제 비교의 의의와 접근 방법	5
1. 남북한 경제 비교의 의의	5
2. 비교를 위한 접근 방법	7
II. 남북한 경제의 본질	11
1. 경제 체제의 비교	11
가. 私的 소유 제도와 社會的 소유 제도	11
나.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13
다. 경제적 自由와 경제적 統制	14
라. 개방 경제와 폐쇄 경제	16
2.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비교	18
III. 남북한 경제 개발의 성과	21
1. 분단 직후의 산업 여건	21
2. 6.25동란과 戰後 산업 복구	23
3. 경제적 성과	26
가. 경제 개발 계획과 그 성과	26
나. 산업 부문간의 구조	31
다. 남북한의 GNP 증가 추이	34

IV. 주요 부문별 현황	38
① 총량 부문	38
가. 인구 및 영토	38
나. 연도중 경제 성장	40
2. 재 정	45
가. 세 출	45
나. 세 입	49
3. 농수산업	51
가. 남북한 농업 부문의 주요 특징	51
나. 농업 생산의 기반	55
다. 식량작물의 생산	60
라. 축산업 실태	63
마. 수산업 실태	64
4. 광공업	67
가. 광공업 자원 및 에너지	67
나. 중화학 공업	74
1) 철강 및 비철금속 공업	74
2) 기계 공업	77
3) 화학 공업 및 건재 공업	81
다. 경공업 부문 및 소비재 공업	84
라. 기술 수준	88
5. 수송·통신	91

6. 대외 거래	97
가. 무역 규모	97
나. 무역 구조	101
7. 주민의 생활 수준	105
⑤. 요약과 결론	109

I . 남북한 경제비교의 의의와 접근방법

1. 남북한 경제비교의 의의

한반도는 불행히도 南北分斷으로 인해 서로 다른 理念을 갖고 있는 두개의 經濟體制가 兩立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들 두개의 經濟體制는 지금까지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대립, 政治·軍事的 긴장과 더불어 남북 각 지역간의 경제흐름 역시 단절되고 있다. 남쪽지역만의 한국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북한지역은 사회주의적 중앙계획 경제로써 각기 개별적이고 분리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까닭이다.

오늘날 남북한간의 경제역량은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제도, 개발전략 및 정책방향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생산·분배·지출 등 일련의 경제 질서와 구조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成果(Economic Performance)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行態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장기간 持續되어 감에 따라 그 이질성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의식(Economic Mentality)이 적극적이라면 북한은 소극적이다.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그 행동이 能動的인 반면에 북한주민의 경제의식은 수동적이라는 대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南北韓이 ‘하나의’ 經濟圈으로 뭉쳐질 경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제로 비약·발전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

능성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남북한의 경제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와 북한경제의 윤곽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고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남북한 경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경제 비교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한의 경제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가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分斷經濟」의 종합적인 位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남북한 경제 비교는 분단의 해소 내지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시사하여 준다. 비교를 통해 나타난 각각의 開發成果 및 經濟力量의 격차는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그 격차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분단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경우 低水準에 있는 어느 일방의 경제가 好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分斷費用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Economic Opportunity Loss)이 제거되고 남북한 지역간 상호 보완적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한국경제는 「규모의 경제」(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평화적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 가는 기본방향을 제공하여 준다. 즉 남북한의 경제 현실에 대한 비교는 어느 일방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단에 따른 긴장의 해소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接近方法으로서 생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남북한 경제 비교는 통일 이후 선택되어야 할 理想的인 경제체제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근본적으로 남북한간 경제역량의 격차는 경제체제의 상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거니와,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의 자유와 복지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實利的인 통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남북한 경제 역량의 비교·평가는 상이한 경제체제 가운데 바람직한 하나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제체제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비교를 위한 접근방법

남북한의 경제 실상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容易한 작업이 아니다. 남북한이 상호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형성·유지하고 있거니와, 특히 북한은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각종 경제 관계 자료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 비교에서의 제약 요인이나 유의하여야 할 문제들 중 몇가지를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역량을 비교하는데 있어 부딪치는 가장 커다란 제약은 북한측 자료의 빈곤 문제이다.

閉鎖體制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에서는 1965년부터 경제통계

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김일성의 신년사, 예산·결산 보고서, 경제계획 보고서 및 각종 행사등의 보고서에 나오는 단편적인 몇개의 자료가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의 전부인데, 그것도 대부분이 통계가 발표되지 아니 한 特定年度를 기준으로 하여 指・倍數로 발표하기 일췌이므로 경제통계를 時系列化 하기 어려움은 물론 실적의 과장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 경제 분석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체제의 相異에서 야기되는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고 남북한의 경제역량을 비교함에 있어서 민간경제활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체제를 단순히 자본주의적 시각만으로 분석한다면 큰 謬誤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얼핏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와같은 謬誤는 자주 발견되고 있다. 북한은 私有財産 및 경제적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재산의 소유형태는 물론 생산·공급·유통체계, 소비 패턴 등 경제구조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째, 북한에서 사용하는 經濟用語의 개념, 경제통계지표의 단위 등이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의 그것과 다르거나 분명하지 않은데서 오는 제약이다.

이들테면 한나라의 巨視的인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일정기간에 국민경제가 생산활

등을 통해 새로이 추가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 합계를 나타내는 국민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총생산(GSP : Gross Soci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총생산이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사회주의 경제에서 창출된 재화의 단순 總生産高를 말하며 여기에는 서어비스(용역)부문은 非生産的이라고 하여 계산되지 않고 있으나 最終財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中間生産物이 합산되고 있어서 實物生産의 價値가 二重計算되고 있다. 또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소득의 경우도 한국의 그것과 용어는 동일하지만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경제지표의 단위를 불분명하게 발표하는 점도 비교분석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직물 생산량을 표시할 때 단순히 길이로만 표시하고 폭은 밝히지 않는 다든가, 농산물을 穀種別 생산량은 밝히지 않은 채 조곡기준으로 생산총량만을 발표한다든가 또는 화학비료 생산량을 성분함량 기준이 아닌 물량기준으로 발표하는 등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비교 연구상의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本 比較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것은 반복적인 일련의 북

한경제지표의 추정 및 검정을 통하여 推定量의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상의 정확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때 추정되는 북한의 각종 주요 경제지표들은 자본주의적 개념과 단위로 동일하게 變換시킴으로써 한국과 비교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역량을 비교·평가함에 있어서는 먼저 양쪽 경제체제의 본질적 차이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분단이후 서로가 실현한 경제개발의 성과(Performance)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경제를 動態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비교는 개개 통계수치의 나열을 통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경제체제, 경제구조, 경제적 안정도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한 구조적·기능적 인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구명하도록 노력하였다.

Ⅱ . 남북한 경제의 본질

1 . 경제체제의 비교

경제체제의 개념은 分析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되어 있는 점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의 경제 행동이나 경제 성과에 常規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내지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념을 指向해서 사회의 각 구성체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경제에 있어서의 규범적인 기본 틀이라고 정의하고 남북한의 경제 체제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가 . 私的 소유 제도와 社會的 소유 제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私有 財産 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바탕으로서 생산수단의 소유를 전적으로 국유화 내지 사회화하고 있다.

자유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한국은 대부분의 재산과 생산 수단이 私的 所有로 되어 있다. 단지,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도로, 항만, 전력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과 국·공유림을 포함한 국유 토지, 강·하천, 호수 및 海域·水域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부 시설과 자연 자원만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으로 管理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북한은 어느 공산권 국가보다도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분단이후부터 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과 중소 상공업을 「이용→제한→개조」라는 3단계의 정책을 실시하여 1958년에 완전히 국·공유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의 임금과 분배 몫으로 구득할 수 있는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생산물이나 생산수단이 국·공유화되어 있다.

이러한 所有制度上的 본질적인 차이는 남북한 국민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의 차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한국 국민의 경제활동이 개인 소득의 증대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의 기초는 노동당이나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個人의 경제의식도 한국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데 반해 북한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도 한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중앙 당국을 중심으로 하여 一元化되어 있다.

나.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자원의 배분 및 경제활동이 한국은 시장기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勞動, 資本, 技術 등 각 생산요소나 각종 생산물의 需給과 가격이 시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자동조절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해 북한경제는 중앙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계획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관리·운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중앙계획에 따른 巨視的인 需給物量 調整은 경쟁적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계획당국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배분면에서 最適均衡을 이룩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나타난 需給不均衡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단순한 조정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경제하의 조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격은 북한에서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경쟁적 시장가격이 아니라 계획가격이며 따라서 북한에서의 가격은 계획 수행을 위한 통제변수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만 북한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하여 둔감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 및 기능은 필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계획 및 관리 업무의 過多로 계획·관리 기구의 肥大化를 초

래하였고 이윤 동기 (Material Incentive)가 결여됨에 따라 家計・企業 등 경제단위의 창의와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계획 목표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계획 부서와 생산 단위간에 마찰을 초래, 경제적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1930년대 소련이 채택하였던 원시적인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의 고수에 한계를 느끼고 뒤늦게 기업소나 공장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지방 예산 제도의 채택, 가격의 기능과 역할의 강조 등 경제 관리면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상의 체제적 특징을 전술한 소유 제도와 관련지워 본다면, 한국의 시장 경제는 私的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소득은 자동적으로 해당 경제 주체의 소유가 되며, 투자이건, 소비이건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활동의 목적이 국가 자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우선을 두고 있는 데다가 모든 경제 활동도 집권화된 중앙 계획 당국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 얻어지는 생산물이나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다. 경제적 自由와 경제적 統制

한국 경제는 개개의 경제 주체에 대하여 자유와 평등의 질서속에서 경제 활동이 가격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교란시키는 방만한 경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모든 경제 행위에 대한 경제적 자유 (Economic Freedom)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분단 이후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경제적 자유의 보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창의와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장치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경제는 정권 당국을 軸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움직여지는 통제 경제이다.

북한은 경제 주체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경제적 의사 결정과 행위가 정권 당국에 의해 집권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개인적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조차도 정권 당국의 의도적인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소유권의 행사 또는 경제 행위가 거의 곤란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직매점에 가서 생필품을 購得하는 것이 북한의 私的 經濟 行爲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나마도 공급량의 절대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이 그 기회를 얻기란 좀처럼 힘들다. 북한 경제에 있어서 직업 선택이나 소비자 選好, 생산과 투자 활동 등에 있어서의 자유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요컨대 북한의 중앙 집권적 통제 경제 체제는 어느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중앙 당국의 목적을 앞세워 사적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계획 당국을 제외한 모든 下部 經濟 單位들은 타율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 개방 경제와 폐쇄 경제

남북한의 경제 체제는 경제 개발 전략면에서도 서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개방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一國家 社會主義」라는 스탈린 방식에 따라 폐쇄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경제 개발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공히 인구에 비해 영토가 협소하고 자원 및 축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여건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하였다. 산업 구조면에서도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38.7%를 차지하여 공업화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연 자원도 절대 부족한 어려운 여건이었다. 한국은 소득 수준이 낮으니 소비의 절대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국내 수요가 적어 산업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녀시(R. Nurkse)가 지적한 대로 빈곤하니까 더욱 빈곤하여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그대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후진 경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이 채택한 전략이 바로 對外 指向的 경제 개발, 즉 개방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良質의 人力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개척하는 등 경제의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外資의 원활한 확보와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지금까지 경제의 고도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反하여 북한은 원시적 형태의 폐쇄 체제인 「아우타르키」(Autarky) 경제 체제를 고수하여 왔는데, 이는 1966년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일관된 노선”이라고 선언, 그들의 고립주의적 폐쇄 체제를 강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 체제는 각국은 종합적인 산업기반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탈린式의 「一國家 社會主義」를 교조적으로 모방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공산권으로부터의 援助가 격감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고립적 폐쇄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조건이 열악한 북한이 對內 指向的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폐쇄 체제의 고수로 인한 투자 재원의 부족과 기술 낙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70년대의 6개년 계획 기간 중에 대외 경제 협력을 시도, 外資 및 플랜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김일성

의 소련 및 동구 순방, 중국과의 빈번한 접촉, 합영법 발표 등 보다 적극적인 개방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대외 개방화의 모색은 투자 여건의 미비와 수출 부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970년대 말부터는 外換 不足으로 누적된 외채의 상황이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 국제적인 신용마저 실추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 경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폐쇄적 자립 경제 체제의 고수로 인하여 경제 운용 능력의 미숙, 산업 구조상의 왜곡 등 개방 체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결여된 데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2.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비교

한국은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국민복지의 향상과 자립경제의 달성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安定基調위에서의 適正成長 追求라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次에 걸친 石油波動, 1980年の 일시적인 사회불안과 흉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70년이후 오늘날까지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경공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건설촉진정책을

강력히 그리고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공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화 정책은 공업구조의 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세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추구함이다. 이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여 왔다.

네째, 국민복지의 증진과 경제적 형평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복지정책의 추진기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복지시책의 폭을 착실히 넓혀 나가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제정책기조는 武力에 의한 對南赤化 實現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첫째, 북한은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을 앞세워 자립경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립이란 自己完結的인 性格이 강하다. 그러나 자원이 절대부족한 조건하에서 자력갱생 원칙의 고수는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기술의 낙후,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최근 뒤늦게나마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당면 과업으로 설정하는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서두르고 있으나 상품경쟁력의 부진, 국제적 신용의 실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重工業 優先 政策의 계속적인 추구이다. 그 결과 북한은 자원의 낭비와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나아가서는 공장·기업소의 조업율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 군사와 경제의 並進策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으며, 60년대 중반기에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1966년 10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군사·경제의 並進路線을 공식화 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 경제정책 운용의 기조로 삼아 왔다. 이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부담은 북한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Ⅲ. 남북한 경제 개발의 성과

1. 분단 직후의 산업 여건

8·15해방 당시 남북한의 산업배치는 「南農北工」으로 불리울 만큼 특징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북한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水資源을 이용한 전력, 금속·화학공업 등이 배치되어 있었던 반면, 남한지역은 주로 농업지대로서 약간의 경공업 시설이 분포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남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電力, 中間財의 상당량을 북한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었으며, 북한지역에서 부족한 식량은 남한지역에서 공급받는 등 지역적 보완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남북분단으로 이와같은 보완관계는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았음은 물론이다. 특히 한국은 공업생산에 있어서 북한의 電力 및 資源供給源을 잃게 됨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왜곡된 자유의 亂舞, 左右翼間의 투쟁과 파업 소동 등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한국의 산업은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 있었다. 당시 한국의 기업가들은 장기적인 생산계획을 세울 의욕을 잃고 있었으며 단기적인 상업이윤이나 投機를 추구하는 데 급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惡性 인플레이가 일어난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인구는 북한지역에 비해 남한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규모는 당시 절대빈곤에 가까운 경제적 상황에서 적정인구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1946년 남한지역의 총인구는 북한인구의 2배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인구밀도는 북한에 비해 거의 3배 수준에 달하였다. 특히 1950~1953년간의 6·25동란 이후에는 피난민이 남한지역으로 대거 유입됨으로써, 戰亂에 따른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지역의 인구밀도는 북한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人口過密은 당시의 경제규모가 너무 低水準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생산적인 人的 資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扶養人口數만을 높여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인구 구성면에서 북한지역은 당초부터 남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제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부존자원면에서도 북한이 한국보다 유리하다. 지하자원 매장량을 보면 철, 중석, 니켈, 마그네사이트 등 대부분의 광물이 북한지역에 편중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석탄 매장량은 비교가 안될 만큼 북한지역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 하여금 석탄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중공업 우선 전략의 기초여건을 마련하여 준 셈이 된다. 또한 임산자원 및 수자원의 경우에도 북한지역에 우세하게 부존되어 있다. 한반도의 총면적 가운데 73%가 산림면적인데, 그 중 60%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수자원도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하여 북한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여건은 남한지역이 평야가 많은 관계로 북한보다는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북한의 기후조건은 한냉전선의 영향으로 농업에 불리하였으며 농경지에 있어서도 총면적의 14.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한지역의 과밀한 인구를 감안한다면,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북한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여건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6·25동란과 戰後 산업 복구

6·25동란으로 한국과 북한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다. 모든 산업시설과 도로 및 항만시설들이 거의 파괴되었고 기존의 생산조직과 유통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산업생산은 극도로 침체되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비료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데다가 水利設施의 파괴와 農業用水의 부족 등으로 그 당시의 主宗産業인 농업부문의 생산마저 저조하였다.

휴전 이후 한국의 산업복구사업은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 추진되었다. 1954~59년의 전후 복구 기간에 한국이 미국을 비롯하여 友邦과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원조의 총액은 약 27억불에 달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중 총투자액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이 기간중에 이루어진 총투자중 국내저축으로

충당된 것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휴전 이후 미국의 對韓援助는 6·25동란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업의 복구와 그 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충주비료공장, 인천판유리공장 및 문경시멘트공장의 건설 등이 이를 대표하고 있다. 그 밖에 1백여량의 디젤기관차 구입, 170마일의 新鐵道 노선의 건설과 마산, 삼척 및 당인리 제 2 화력발전소 건설도 이 시기에 추진되었다.

한편 북한도 자신이 도발한 6·25동란으로 인해 각종 산업시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북한은 6·25동란이 끝난 1954년에 3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생산을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전란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는데 全力을 다하였다. 이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은 소련, 중공 및 동구공산제국으로부터의 경제 및 기술 원조와 근로자, 농민들의 노동력을 토대로 계획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북한은 발표하였다. 이 계획기간을 통하여 거둔 성과로는 파괴된 산업시설, 특히 중공업기지의 복구·건설 이외에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를 강화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계획기간중 가장 중요한 특징적 변화의 하나로 사회주의제도의 강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현저한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의 광공업 생산액중 국영 및 협동단체의 생산비중은 90.7%였으나 1955년에는 98.3%로 높아졌으며 광공업부문의 민간생산은 주로 수공업적인 일용품, 소규모의 정미소, 打綿業, 建材業에

한정되었다. 또한 농업총생산액중에서 國營農牧場과 農機械賃耕所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에는 3.2%에 불과하였으나 1954~58년에 집단농장화를 시행함으로써 협동농장과 국영농목장의 생산비중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업부문에 있어서도 1949~1955년에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의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었다. 즉, 同 期間中 소매상품유통액 중에서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에서 84.6%로 높아진 반면, 개인상업은 43.5%에서 15.4%로 줄어들었다.

한편, 1954~56의 전후복구 3개년 계획기간 중에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의 급속한 복구발전을 도모한다는 기본정책에 따라 기본건설 투자를 공업부문에 집중하여 대규모 공장의 복구 건설과 기술인력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공업부문 생산은 1949년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 구성비도 높아졌다. 따라서 계획기간중 광공업 부문은 이례적인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었다. 왜냐하면 계획의 초기년도에 있어서의 광공업생산의 성장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기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북한발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같은 기간중의 광공업 성장률은 1954년에 51%, 1955년에 52%, 1956년에 27%로서 마지막 년도에는 격감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곡물생산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다. 계획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

라고 해서 3차에 걸쳐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비해 37%나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표에 미달하였다.

3. 경제적 성과

가. 경제 개발 계획과 그 성과

한국에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제 1차 계획(1962~66년)에서는 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력, 철도,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개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계획 내용 자체도 物量目標와 추진수단들이 明記되는 다분히 구체적인 물량계획이었다. 그러나 점차 경제규모가 확대, 복잡화되고 민간자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 자체의 성격은 보다 추상화되어 誘導計劃의 형태로 변모해 갔다. 이와 더불어 제 1차 계획에서는 수출 증대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도 주력하였다.

제 2차 계획기간(1967~71년)에는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의 개발 등 공업구조의 개편과 수출산업 주도의 고도성장, 高米價政策에 따른 농업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제 3차 계획기간(1972~76년)에는 造船施設의 확충, 종합제철소의 완공, 석유화학공장의 건설확대 등 획기적인 중화학공업의 발달을 통해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였다. 또한 4大江 流域 開發

을 비롯한 국토의 종합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어촌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로 농어촌 극대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제 4 차 계획기간(1977~81년)에는 기계, 전자,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성비율을 보다 높여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79년초 이란의 회교혁명에서 비롯된 제 2 차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세계경기의 침체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었고 1980년에는 농작물 흉작까지 겹쳐 대내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높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악화라는 三重苦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제 5 차 계획(1982~1986년)이 수립되었다. 제 5 차 계획에서는 「안정, 능률, 균형」이라는 기본목표 하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의 再編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과거 정책으로 파생된 부문간 및 부문내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기간중 재정긴축정책과 통화공급수준의 적정화를 통해 물가안정 기반이 구축된 것은 제 5 차 계획의 획기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경제계획들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한 기업간 자유경쟁의 원칙을 토대로 하였으며 기간산업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에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에 있어서는 외자도입을 통해 충당하였다.

요컨대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을 주력하면서 국제협력의 확대와 輸出伸張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수입자유화의 폭도 늘려나가는 개방 체제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공업화전략에 따른 경제계획의 추진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사실, 제 1 차 계획기간에 연평균 7.8%, 제 2 차 계획기간에 9.6%, 제 3 차 계획기간에 9.8%, 제 4 차 계획기간에 5.8%, 그리고 제 5 차 계획기간에 8.7%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는 양적 성과만 보더라도 능히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면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내지 指令經濟體制를 고수하여 왔다.

북한은 1947년부터 경제계획을 실시하여 왔으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형태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57년~60년의 제 1 차 5개년 계획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8년말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기초한 생산활동이 일체 부인되고 “인민경제 운영에 로동당의 의사”가 조직적으로 작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58년 이래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시장이나 경쟁가격을 否定한 토대위에서 생산재의 할당제, 소비재의 배급 등 모든 경제활동을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르는 指令經濟體制로 전환시켰다.

북한의 중·장기계획에서는 사회총생산 및 주요 산업별 생산의 증가, 투자, 소비 및 군사비지출, 주요 재화의 생산목표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차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데 여기에는 모든 재화의 기업소에 대한 연간생산목표와 생산지령이 함께 포함되며 아울러 자원의 용도별 배분도 제시된다.

북한의 산업개발계획을 경제발달 정도에 따라 大別하여 보면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945~60년, 1961~70년, 그리고 1971년 이후의 3단계이다.

제 1 단계인 1945~60년은 공산정권의 수립, 6·25동란과 전후복구를 거쳐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한 기간이다. 그동안 국제환경은 소위 中·蘇 蜜月時代로서 북한은 物心兩面에서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제 2 단계인 1961~70년은 中·蘇 대립의 여파를 받아 前半期는 소련과 대립, 後半期는 중국과 대립하는 등 공산권의 양대국 분쟁에 휘말려 들어간 기간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쿠바 위기,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받아 군사력 증강에 광분한 결과 경제건설은 순조롭지 못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70년 11월 제 5 차 당대회에서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성장했다”고 선전하였다.

제 3 단계인 1970년 이후는 북한이 중·소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소위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 3 세계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방세계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특히 일본이나 서구제국과 교류함으로써 선진설비와 기술을 도입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바야흐로 「기술혁명」의 추진시대가 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서방제국과의 접촉은 근대적 공장건설의 대가로서 대외 채무상환 불이행이라는 뜻밖의 사태를 초래하여 마침내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기간중에 조선, 기계, 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과 최초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이 있었지만 그 裏面에는 각 산업부문의 불균형, 과학기술 발달의 지체, 생산의 높은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6개년계획은 1975년 8월말로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약 2년반의 調整期를 두고 1978년부터 제 2 차 7개년계획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제 2 차 7개년계획기간(1978~84년)중에도 역시 60% 이상의 목표수행률을 기록한 부문은 공업부문중 직물, 시멘트, 화학비료, 공작기계와 알곡 생산뿐이며 나머지 부문들은 당초 계획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 3 차 7개년 계획(1987~93년)이 수립되기까지 3년이라는 조정기를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조정의 내용도 80년대말 「10대 전망 목표」들을 기간 연장의 형식으로 계획목표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요컨대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이에 뒤이은 5개년계획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실현했으나 그 후 계획들은 그 성과가 기본목표에 미달하여 차질을 빚었다. 단지 전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한 것은 6·25동란의 戰災로 인해 그 출발수준이 극히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 1 차 7개년계획에서는 광공업은 목표의 72.2%, 농업은 57~67%, 수산업은 50~70% 밖에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同 計劃의 3년 연장기간에는 석탄과 전력의 생산만이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이었다. 70년대초부터 추진된 6개년계획과 제 2 차 7개년계획에서도 북한이 제시한 주요 산업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미달되어 계획기간이 모두 2년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계획 실패의 연속은 북한이 硬化된 경제조직의 운용을 고수함에 따른 결과임은 물론이다.

나. 산업 부문간의 구조

한국 근대화는 자유자본주의체제와 개방체제하의 국제분업주의를 바탕으로 농업보다는 공업을,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같은 공업화정책은 (1) 수입→생산(수입대체)→수출의 유형에 의하되, (2) 이러한 과정은 소비재→중간재→자본재로, 나아가서는 지식 및 정보산업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개발초기의 경공업부문의 개발은 경공업이 투하

자본의 懷妊期間이 짧고 노동집약적이며 기술 습득이 용이한데다가 당시의 자본부족, 과잉인구, 기술낙후 등의 공업화 여건에 비추어 時宜에 알맞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경공업 육성 정책은 수입대체와 동시에 수출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기술집약적인 새로운 산업의 개발을 모색하였다. 즉 60년대의 산업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제 3 차 5개년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공업의 고도화를 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전략을 채택한 결과 그동안의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농어업의 구성비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962년에 36.6%였던 것이 1971년에는 27.0%, 1981년에는 18.0%로 저하된 반면에 광공업의 비율이 같은 기간에 16.2%, 22.4%, 30.9%로 각각 높아졌다. 그리고 이 기간에 공업생산의 구성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1962년에는 경공업이 73.2%로써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로 그 구성비가 저하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 1985년 현재로 55.4%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뿐만아니라 경공업의 생산도 산업의 고도화 및 과학·기술의 축적에 따라 高附加價値 商品의 생산으로 그 체질을 착실히 전환하여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는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前近代的 산업구조로부터 공업 중심의 근대적 산업구조로 이행되었으며 공업생산물의 내용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생산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의 산업구조는 인위적인 「개조」의 방식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북한은 해방과 더불어 소련형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그대로 모방하였는데, 이것은 경제건설의 목표를 자기완결적인 자립경제를 확립하는데 두고 중공업 우선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의 연평균 총투자액 가운데 광공업부문이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56년)에서는 49.6%, 제1차 5개년 계획(1957~60년)에서는 51.3%, 제1차 7개년 계획과 그 연장기(1961~70년)에서는 60%에 달했으며 이는 제3차 7개년 계획이 추진중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광공업 투자액의 구성을 보면, 중공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공업과 경공업의 상대적 비율은 1954~56년에는 81.1% 대 18.9%, 1957~60년에는 82.6% 대 17.4%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부문간의 斷層現象을 유발시킴으로써 마침내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애로요인이 되고 말았다.

60년대 전반기에 북한은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제의 하나로 「주민생활의 향상」을 내세워 경공업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내걸었던 이른바 「경제와 군사 건설의 병진로선」을 그대로 견지하였기 때문에 경공업에 대한 연평균 투자율은 28%에 불과하였다. 군사·경제 병진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軍費支出이 대폭 증대되고 보니 경공업 분야에 돌아갈 투자

의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병진책의 지속은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최근 이른바 “경공업 혁명”, “인민봉사 혁명” 등의 구호 아래 북한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의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북한이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 왔던 경공업 부문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목거리가 될 뿐이다.

다. 남북한의 GNP 증가 추이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분단직후의 경제개발 여건은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유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각기 다른 경제체제와 정책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역량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더우기 침체된 북한의 경제가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이제 남북한경제개발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GNP의 성장추세를 통해 동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과 그림 2 참조)

6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 속도에 있어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 여건이 한

국에 비해 매우 유리하였던 반면에 한국은 축적자본의 빈곤, 정치·사회적 혼란, 북한주민의 월남으로 인한 부양인구의 증가 등이 경제를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한국은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침체된 경제가 서서히 생기를 찾았으며 60년대 후반부터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빨라졌다. 북한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어 갔다. 이것은 북한이 私的 所有의 否認으로 비롯된 노동의욕 상실, 기술낙후 등으로 인해 저생산성을 면치 못하였고 더우기 폐쇄체제의 고수로 대외 경제협력과 선진자본 및 기술도입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우선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산업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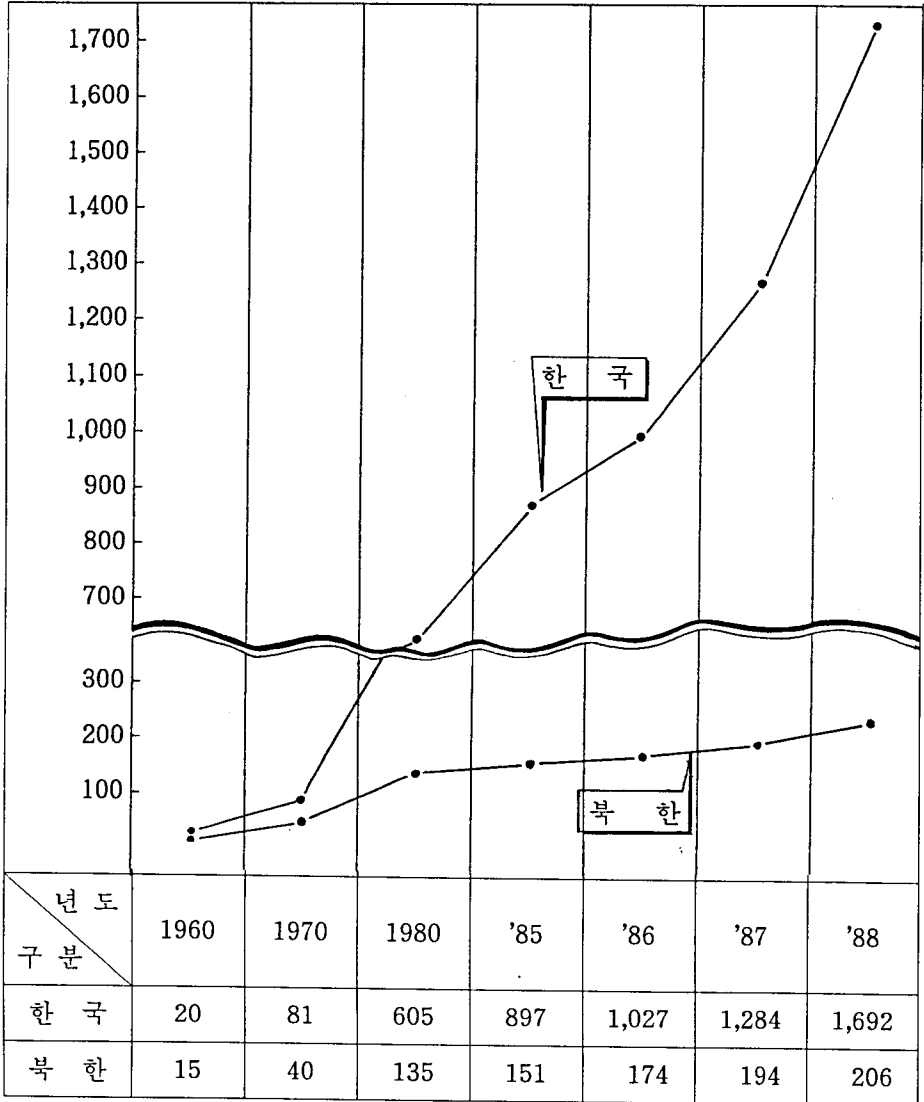
한마디로 오늘날 남북한경제역량의 엄청난 격차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남북한 총량규모의 증가 추이에 따라 인구 1인당 GNP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지난 1974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1인당 GNP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 경제가 총량면에서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가 북한을 앞서는데 거의 10년이 걸린 것은 그 만큼 한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남북한 GNP 증가 추이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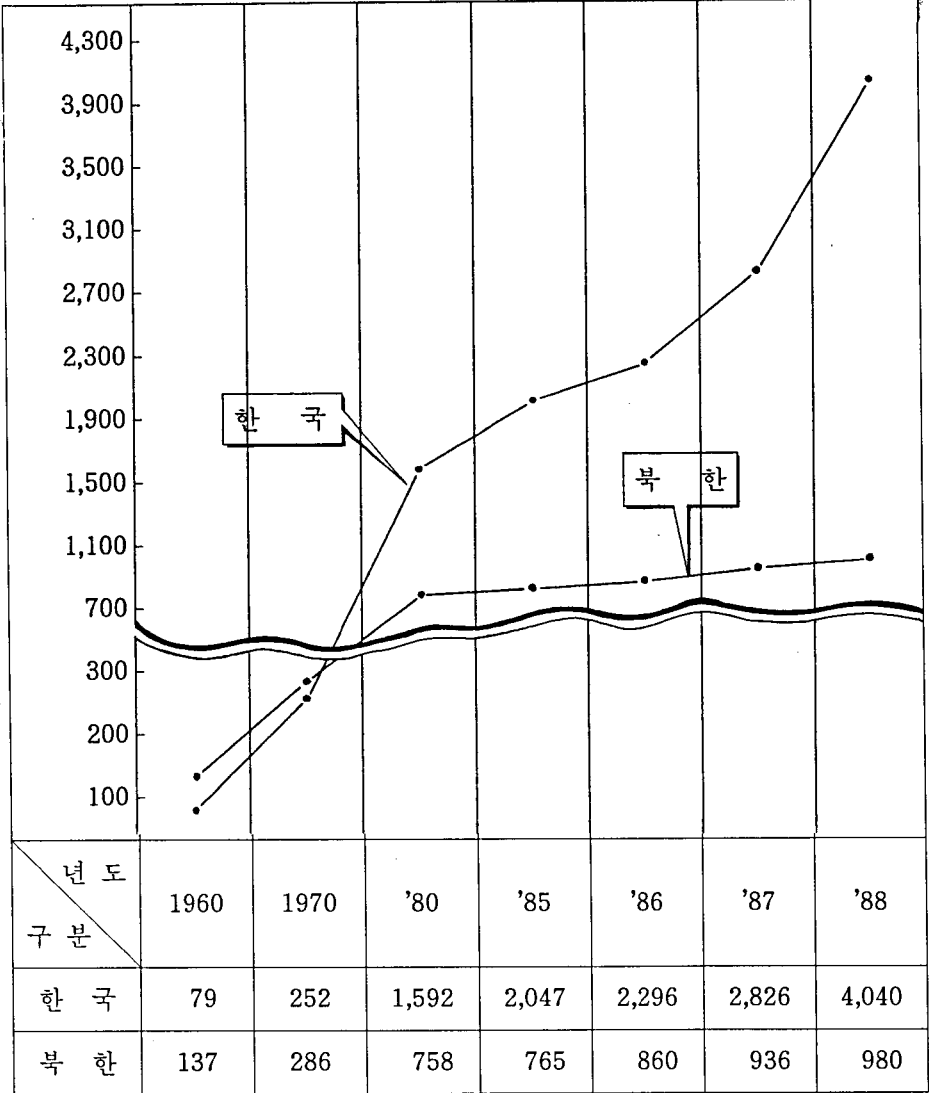


資料 : 한국은 한국은행, 북한은 국토통일원

<그림 2>

남북한 1인당 GNP 변화 추이

(단위 : 달러)



자료: 한국은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북한은 국토통일원

IV. 주요 부문별 현황

1. 총량 부문

가. 인구 및 영토

1988년도 남북한의 인구는 한국이 41,975천명, 북한이 21,030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한국이 0.97%, 북한이 1.67%로서 한국보다 북한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북한역시 인구증가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한국이 17,305천명으로 총인구의 41.2%를 점유하며 15세 이상 人口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58.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9,271천명으로 북한지역 총인구의 44.1%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豫備兵力 이외의 正規軍만 하더라도 그 數가 87만5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층에 있는 학생수는 15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독재대상지역 및 교화소에 많은 수용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 家事從事者, 年老者 및 심신장애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와 제도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非經濟活動人口의 폭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북한이 勞力動員 最大化 政策의 일환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감축시키는 갖가지의 施策을 전개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 실례를 들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여성들을 부엌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미명 아래 대부분의 가정주부를 생산활동에 참여케 하고 있는 것이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 社會扶助의 대상인 노인들까지 勞動의 對象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 등등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노동이 非自發的 勞動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노동이란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移動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생겨나는 노동으로 노동의욕이 크게 상실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은 低水準에서 맴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북한체제 내부의 구조적 경직성, 기계설비의 노후화,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의 낙후 등도 직접·간접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단순 노동력 위주의 경제건설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동인구의 증가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低水準의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북한의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는 파행적인 경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면적은 한국 전체가 22만여km²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남한

지역은 9만9천여km²이고, 북한지역은 12만2천여km²로서 한국이 총면적의 45%, 북한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영토의 이용면에 있어서 한국은 평야지대가 비교적 많고 기후조건이 좋아서 농업생산과 교통운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고 낭림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東西로 분리되어 있어서 농업 및 교통운수면에서 한국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자원과 水資源이 북한에 偏在하고 있고, 景觀 또한 秀麗하여 공업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나. 연도중 경제 성장

1988년도의 한국 경제는 勞使紛糾, 원貨 切上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設備 投資를 비롯한 內需 部門의 好調에 힘입어 물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12.2%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은 지난 1986년 이래 연 3년째 12%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기간중 전반적인 산업 활동을 보면, 제조업 부문의 그 가동율이 80% 수준을 상회하고 생산도 13.4%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성장을 주도하였다. 특히 수송용 기기, 전기·전자기계, 일반기계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기를 보였

다. 그러나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人件費 비중이 높은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은 그 증가세가 한자리 數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농림수산업 부문도 전례 없이 높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이 연근해 어획고와 굴 양식 등에서 다소 부진함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식량작물의 풍작과 축산업의 호조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건설 부문 및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特需의 증대와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의 실시로 활황을 보였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원貨 價値의 상승과 高賃金, 高原資材 가격 등으로 수출 여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그러나 각 기업이 그동안 다져 온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무역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보다 확대되었으며 무역외수지 역시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外貨受入이 증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1988년 경제성장률은 3.0%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성장을 3.3%에도 미달하는 것이며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성장을 7.9%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북한은 기간 중 전년도에 이어서 1989년 7월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 평양 개최 준비를 목적으로 특히 非生産的이며 展示的인 건설부문에 人的·物的 資源을 총동원하여 왔다. 이에 따라 체

육·문화 시설 및 도시 주택의 건설, 평양 시가지 정비 등 건설 부문은 북한 경제성장의 先導 部門으로서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며 건설 추진에 직접 연관되는 일부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도 어느 정도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때문에 餘他 산업 부문의 생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말았다.

북한이 다른 産業 部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건설부문에 힘을 쏟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政治的 目的에 연유한다. 한국의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의식하여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북한의 건설분야 집중 투자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왜곡된 자원의 배분은 산업부문간 불균형 심화, 노동의욕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특히 한정된 투자재원 중 생산적 부문에 돌아갈 투자 몫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생산적 부문은 특히 석탄, 전력 등 에너지 부문과 금속·화학공업 등 기간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기본 건설 사업 중에서 완공 단계에 있거나 소규모의 투자재원으로라도 추진이 가능한 건설대상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한편, 대외적으로 북한은 적극적인 무역증대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기술낙후 및 국제적 신용 실추에 기인하여 수출이 부진한데다가 건설 부문의 집중적 추진에 따른 수입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1988년도 북한의 경제는 정치적 목적의 투자재원 확보 및 군사비 지출의 보장을 위해 주민생활 수준을 억제하는 종래의 기본 정책 노선이 변화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운용을 시도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만성적인 침체국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총량의 규모는 더욱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88년 현재 한국은 GNP가 1,692억불이며 1인당 GNP는 4,040불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GNP가 206억불, 1인당 GNP는 980불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북한 경제총량의 격차는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이른바 「南高北低」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고, 반면에 북한은 체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에서 야기되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만성화된 저성장경제에서 아직까지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원의 배분면에서 볼 때,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군사비의 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

적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GNP에 대한 군사비의 구성비율은 21.5%로서 전년보다 다소 낮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군사비 부담은 그 부담이 큰 만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따라서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군사비/GNP비율은 세계평균수준을 밑도는 4.6%에 불과하여 북한의 높은 군사비 부담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1> 주 요 총 량 지 표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한국 : 북한
인 구 ¹⁾	천명	41,975	21,030	2.0 : 1
인 구 증 가 율	%	0.97	1.67	—
경 제 활 동 인 구	천명	17,305	9,271	1.9 : 1
경제활동 참가율 ²⁾	%	58.5	65.3	—
면 적	천km ²	99.2	122.8	1 : 1.2
G N P	억불	1,692	206	8.2 : 1
1 인 당 G N P	불	4,040	980	4.1 : 1
경 제 성 장 륜	%	12.2	3.0	—
군 사 비 / G N P	%	4.6	21.5	—

자료 : 한국은 경제기획원, 북한은 국토통일원

주1) : 한국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은 1985년 센서스인구분석결과를 기초로 보정된 통계임.

2) :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임.

2. 재 정

한국은 私有 財産 制度를 바탕으로 민간의 경제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도록 경제적 여건을 보장하고 자유시장경제의 危害要因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재정은 북한 경제의 모든 부문을 반영한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의 역할은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를 수행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 세 출

1988년도 한국의 일반 회계 부문 세출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4.1% 증가한 18조250억원(246.8억불)이다. 부문별 세출구성비는 일반행정비 9.9%, 방위비 30.7%, 개발비 42.9%, 지방재정교부금 9.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채무 상환과 재정의 투·융자 기능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지출되었다.

1988년도 한국의 재정 운용은 안정속의 복지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건전 재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욕구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급속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재정의 역할도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8년도부터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 보험을 전면 실시토록 하여 의료 수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986년의 농어촌 종합대책과 1987년의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농어촌의 소득 증대 기반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시책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治水, 공해 방지 등 경제 正義의 實現 및 국민생활의 質的 水準을 向上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1980년의 21.6%에서 1988년에는 14.4%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대신,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1980년의 6.7%에서 1988년 현재 7.8%로 높아졌다.

한국은 연도중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세입내세출 원칙을 견지하도록 했으며 각종 공공기금의 운영을 개선,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축소시켰다. 또한 지속되는 수출의 증가에 따라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재정의 통화관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북한의 세출 규모는 북한 화폐로 316억6,090만원(147.3억

불)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리고 세출 구성비는 對南平和攻勢의 일환으로 군사비 12.2%만을 강조하였을 뿐 나머지 費目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거나 前年比 增加率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발표에 입각하여 기타 비목의 세출 구성비를 살펴 보면, 인민경제비 67.2%, 사회문화시책비 19.0%, 기관관리비 1.6%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세출 구성비 가운데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시책비에 군사비의 상당 부분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정지출 구성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병력 유지비, 군사 부문 투자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본 결과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 구성비는 세출총액의 30%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1966년부터 공식 발표된 북한의 세출 구성비를 살펴 보면 재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경우 인민경제비가 68.4%, 군사비가 10.0% 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인민경제가 44~50%로 감소되고 대신 군사비는 31~3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72년 이후에는 다시 55% 이상으로 인민경제비가 늘어나면서 군사비는 15~17% 수준으로 낮게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일부 「인민군」을 경제 건설에 투입, 「군 병력의 평화적 이용」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발표되는 군사비의 비중 역시 15% 이하의 수준에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비가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군사비를 타비목에 은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1966년까지 10% 이하로 발표해 온 군사비를 1967년에 30.4%로 대폭 증가시켜 발표한 것은 종전의 인민경제비 등에 은폐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60년대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북한이 독자노선을 표방하면서 남침야욕을 노골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1972년부터 군사비가 절반으로 감소되고 인민경제비가 다시 증가한 것은 東西和解와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간의 접촉에 따라 대외선전을 고려하여 평화이미지 부각을 위해 군사비를 타비목에 다시 은폐시켰기 때문이다.

그 실증적인 증거로는 1972년 이후 인민경제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성장은 둔화일로에 있었고, 또한 군사비가 격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어 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988년 기간중의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시책비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체육, 문화시설의 건설, 평양시가지 정비 등 「평양축전」 준비와 관련한 건설 대상에 집중적, 우선적으로 지출되었으며 태천, 위원 등 발전소의 건설, 제철·제강소의 개건·확장, 순천 비날론 기업소, 사리원 카리 비료 공장 등의 공장 건설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많은 재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정치·군사 우선적인 재정 운용은 재

정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재원의 낭비 요인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북한은 체제적인 특성상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 여부가 경제적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 침체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운용 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세 입

한국과 북한은 이념과 제도가 서로 다른 만큼 재정수입의 원천에 있어서도 아주 판이하다.

한국의 경우 재정수입은 조세, 세외수입, 전매익금, 기타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988년 이들의 구성비는 각각 84.1%, 11.4%, 4.3%, 0.2%로서 조세수입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소위 “사회주의 경리 수입금”으로 대부분의 세입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생산활동 결과 수반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재정수입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는 재정규모가 GNP의 7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리 수입금의 내용은 거래 수입금, 국가 기업이익금, 협동단체 소득세,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수입금은 사회주의 경리 수입 부분의 55%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歲入源으로 북한은 이에 관하여 “사회 순소득 부문 중 국가의 중앙 집권적 순소득에 속하는 사회주의 경리에서 파생된 국가 이윤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간접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즉 모든 생산수단과 대부분의 재화가 국·공유화되어 있고 경제 활동 역시 정권 당국의 유일한 계획과 통제하에 움직이는 북한에서는 유통 과정을 통해 거두어 들이는 수입은 모두 당국의 이윤이지 세금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거래 수익금은 주로 소비재에 부과되고 있고 또 生産財 生産 部門에서 창출된 사회 순소득과 일부 서비스 부문의 생산에 대해서도 거래 수익금이 부과됨으로써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므로 간접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기업 수익금은 독립 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의 기업소 및 생산공장에서 일정기간에 얻어진 이윤 중 일정비율의 자체 경비를 공제한 殘餘基金을 중앙 당국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총 예산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협동단체 소득세는 각종 협동단체의 생산 활동에서 얻어진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중앙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기타 수입금은 감가상각 회수금 및 벌과금, 관세, 원조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입 총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1974년까지는 근로 소득세, 문예 소득세, 지방 자치세 등이 세입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5년에 이들을 철폐하면서부터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등은 세금이지만 사회주의 경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주인인 국가가 마땅히 차지해야 하는 이윤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세금이 아니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표2>

주요 재정 지표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재 정 규 모	억불	246.8	147.3
재 정 부 담 륜	%	14.6	71.5
군 사 비 지 출	억불	75.9	44.2
군사비/재정규모	%	30.7	30.0
재 정 증 가 율	%	14.1	5.2

자료: 한국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3. 농수산업

가. 남북한 농업 부문의 주요 특징

남북한 농업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개인 영농 체계와 북

한의 집단 영농 체계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개인의 능력과 의사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생산 활동 역시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북한 농업의 생산 활동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 당국의 결정에 의해 집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특징을 갖는다. 북한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주민에 대해 「주인 정신」을 반복하여 호소하여 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산의욕의 소극화 경향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농업 생산력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중반 이후보다 적극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한 결과 쌀·보리의 자급은 물론 현저한 농가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농업총생산지수가 과학적인 영농기술에 힘입어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80년대에도 한때는 기상조건의 악화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기복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연평균 5%의 성장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농업 생산력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부진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것은 험준한 지형지세, 불리한 기후 조건 등 자연 조건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집단화」라는 제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1966년부터 집단적 영농 체계에서 오는 생산 감퇴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분조 관리제”를 실시, 생산 활동의 책임을 세부

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早熟多收穫 품종의 개발을 통한 생산력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농업의 산업구성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특히 공업 부문의 고도 성장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수산업 부문의 생산 비중이 60년대의 36% 수준에서 70년대에 25%, 80년대에 들어와서는 1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공업 부문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도 역시 공업과 농업의 총생산액 가운데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년대의 26~28% 수준에서 70년대에는 24~26%, 80년대에는 23~25% 수준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제도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 역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자유 의사에 따라 농업 부문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중앙당국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며,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저하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또한 경지면적 및 농업인구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70년대부터는 경지면적과 농업인구가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중앙당

나. 농업 생산의 기반

1988년도 한국의 총경지면적은 213.8만 정보로서 지난해 보다 줄어 들었다. 그 중 논은 耕地整理 확대에 따른 밭의 地目轉換과 간척 등으로 전년도 보다 7천 정보가 늘어난 135.8만 정보였으며 밭은 1만 2천 정보가 줄어든 78만 정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논과 밭의 구성이 남한 지역 총경지면적의 63.5%, 36.5%로서 전년도 보다 논의 구성비가 다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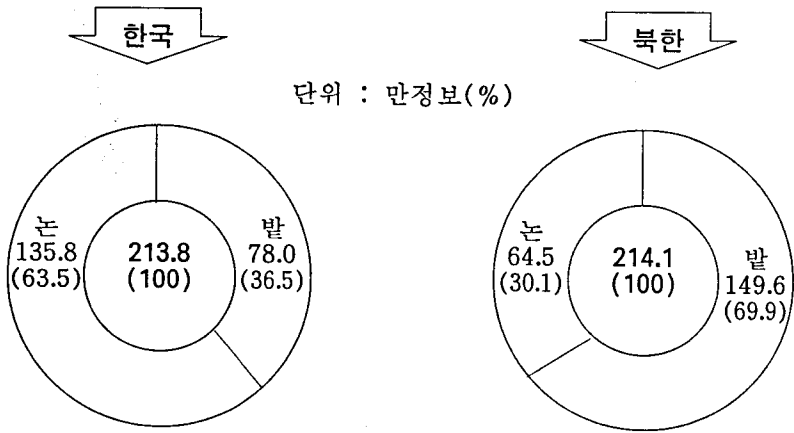
이에 반해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전년도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농경지 확장을 위한 간척지 개발에 주력한 결과, 강령, 은율 등의 간척지 중 일부가 간척됨으로써 논 면적이 약 1천 정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1988년 현재 214.1만 정보가 되었으며 그 중 논 면적은 64.5만 정보로서 북한 경지면적 전체의 30.1%를, 밭 면적은 149.6만 정보로서 전체 면적의 69.9%를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지면적은 절대규모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논과 밭의 구성면에 있어서는 한국은 논농사 중심, 북한은 밭농사 중심으로 특징지워질 만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의 농가인구는 1988년 현재 한국이 72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농가호수도 2.4% 감소된 183만호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의 농가인구와 농가호수는 각각 799만명, 159

〈그림 3〉

남북한의 경지면적



만 1천호로서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호당 경지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한국은 1.17정보로서 전년보다 다소 증가된 반면, 북한은 1.34정보로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즉 한국은 농가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시간과 더불어 농가호당 면적이 증가되는 반면 북한은 농가인구의 계속적 증가로 인해 농가호당 면적이 감소되는 대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를 보면, 한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중공업 부문의 발전 및 농촌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1988년 현재 한국은 트랙터와 동력 경운기 75만대를 비롯하여 동력 이앙기, 수확기, 양수기,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 150여만대를 보유·가동하고 있으나 북한은 트랙터 약

13만 9천여대(15마력 환산 기준)와 그밖에 연결 농기계 약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연도중 농기계의 생산·보급보다는 각종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의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 보유 농기계의 보수·정비를 통한 이용률 제고에 주력하였다.

화학비료의 공급 실태를 보면 한국은 196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1968년부터 완전 자급이 가능해졌으며 1971년 “통일계”의 多收穫 벼 품종의 개발로 비료 소비량이 급증, 다소 자급률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1976년부터는 화학비료의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었다. 특히 화학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地力을 보호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비료가 개발·공급되어지고 있다.

북한도 日帝下에 건설된 홍남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청년 화학 종합 공장, 아오지 화학 공장 등에서 화학비료를 생산, 對內需要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소량이나마 수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현재 남북한의 단위 면적당 시비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외국으로부터 카리 비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균형적인 施肥體系를 갖추지 못하여 농산물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아쉽다. 최근 북한이 제3차 7개년 계획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사리원 카리 비료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북한 施肥體系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모색이라고 할 것이다.

水利化 실적을 보면, 한국의 경우 생산 기반 정비의 일환으로 경지 정리와 더불어 농업용수 개발, 배수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88년말 현재 水利畝 면적은 99.1만 정보로 수리답율이 73%에 이른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18,000여개, 양수장 및 배수장 6,000여개를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 淤, 管井 등의 수리시설 34,000여개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수리시설은 1988년 현재 저수지 1,700여개, 양수장 25,00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관개면적은 130만 정보로서 총경지면적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연도중 농업 투자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증액시키고 농촌 水利化를 위해 저수지 140여개, 양수장 1,600여개소를 개발한다는 연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평양 축전 준비에 따른 투자 재원 조달의 한계에 부딪쳐 10여개의 저수지를 건설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육종이론 및 기술면에서 한국은 이미 국제수준에 달하여 통일, 유신, 수원벼 계통의 다수확품종 개발에 성공, 재배가 일반화된지 오래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육종이론 및 기술분야는 아직 까지도 한국보다 뒤떨어진 저급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부터 뒤늦게나마 필리핀소재 국제미작연구소, 태국농업시험장, 이태리 등지에 전문가와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신품종 입수 및 早熟多收穫品種의 개발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선봉 9호”, “평양 8·15호” 등과 같은 早熟多收穫 벼품종의 개발은 그 성과이다. 그러나 이들 개발품종들의 보급에 있어서는 북한지

역의 기상변동이 심하고 지형지세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병충해, 倒伏現象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한국은 면적이 북한보다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水稻作 중심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의 경지면적 구성과는 반대로 밭이 한국보다 약 1.8배 이상 넓게 차지하여 옥수수를 주종으로 하는 밭농사 위주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산업발전과 더불어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성에 입각하여 농업이 성장·발전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은 주로 경지면적 확대와 노동력의 투입에 의존하여 부족한 식량생산의 절대규모를 증대시키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경지면적의 증가율보다는 노동력의 증가속도가 더 커서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점차 좁아지는 추세에 있는데다가 물질적 유인(Material Incentive)이 없는 집단영농으로 생산성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것이 북한 농업의 현실이다.

한국은 霜降日數, 기온 및 강우량 등 자연조건면에서 북한보다 유리한 농업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북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경지 정리 수준, 水稻作 중심 등에서 오는 기계화 영농상의 불리점도 안고 있다.

〈표 4〉

주요 농업 관련 지표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경 지 면 적	만정보	213.8	214.1
농 가 인 구	만 명	727.2	799.1
호 당 경 지 면 적 ¹⁾	정 보	1.17	1.34
농가인구/총인구 ²⁾	%	17.3	38.0
단보당 쌀생산량	kg	481	326
농기계 보유대수	천 대	동력경운기 : 726 트랙터 : 25	트랙터 : 139

자료 : 한국은 농수산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주1) 경지면적/농가호수

2) 여기서 총인구란 남북한 각지역의 총인구를 말함.

다. 식량작물의 생산

1988년 한국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보당 수확량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보다 611천톤 늘어난 7,299천톤을 기록하였다. 특히 쌀 생산량은 기상 여건의 호조와 매년 예외 없이 나타났던 태풍, 병충해 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전년도 보다 56만톤이 늘어난 6,053천톤으로 근래 보기 드문 최대의 풍작을 나타내었다. 또한 경제성이 있는 보리, 참깨, 땅콩, 고추 등의 밭 작물과 과실류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북한 역시 양호한 기상 조건과 비교적 원활한 영농 자재의 공급에 힘입어 식량작물 생산량이 증가, 지난 1985~87년의 연이은 흉작으로부터 평년작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258천톤이 늘어난 총 521만톤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북한의 주곡인 옥수수 생산량은 2,503천톤, 쌀은 2,099천톤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식량 생산 실적을 국제적으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粗穀概念인 “알곡”을 기준으로 과장하여 발표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구체적인 통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곡종별 과종면적이나 생산량 등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알곡 생산 실적에 대해 해방 직후인 1946년에 200만톤이었던 것이 1947~1949년간에는 薯類를 제외하고 230여만톤의 평년작 수준을 유지하다가 농업 협동화 과정에서 생산량은 점차 증가되어 1961년에는 490여만톤, 1963년에는 500만톤을 생산하였다는 등 비약적인 增産이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위 “주체농법”을 관철하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극복하여 정보당 알곡생산이 1974년에 논벼 5.9톤, 옥수수 5톤, 1979년에는 논벼 7.2톤, 옥수수 6.3톤으로 정보당 수확고가 세계적 수준에 달하였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제2차 7개년계획이 종료된 1984년도에는 알곡 생산량이 목표치인 1,000만톤을 달성하였다고 누차 강조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농업 실적에 관

하여 북한은 구체적인 언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하는 식량 통계는 조곡 개념이라는 것 이외에도 중앙당국이 계획 목표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수확이 많은 분야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발표치와 실제 생산량간에는 엄청난 오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통상 발표하는 식량통계를 정곡 개념의 식량 통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立苗減耗率, 搗精率, 통계치와 實生産量間의 오차를 감안하여 추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또한 여기에는 북한의 경지면적, 식부체계, 병충해 및 자연재해 등 자연 조건과 육종 및 영농기술 수준, 시비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표 5>

남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정곡기준 천 M/T)

구분 연도	한 국		북 한	
	총 계	그중 쌀	총 계	그중 옥수수
1986	6,774	5,607	4,825	2,371
1987	6,688	5,493	4,952	2,409
1988	7,299	6,053	5,210	2,503

자료:한국은 농수산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라. 축산업 실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향상을 위해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낙농업의 부흥을 위하여 60년대부터 사료공급뿐 아니라 경영조직 전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특히 無畜農家の 有畜化를 위한 入殖, 우량품종의 도입과 자금지원, 유통개선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단지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기업적 축산농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북한의 축산은 국영축산, 공동축산(협동농장), 농민들의 부업축산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70년대 이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협동농장과 사료청원들에게 일정 수의 가축을 책임사육케 하는 등 家畜 飼育頭數 증대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빈약한 외화사정으로 인해 가축사료 수입 역시 어려운 여건이므로 북한 축산업의 자립적인 발전은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축산업의 실태에 대한 근본적 차이는 타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한국은 개인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 개인이 의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노력하는데 반해 북한은 축산의 생산구조가 집단화되어 있어 생산의욕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으며 농장원들의 부업축산 역시 사료의 부족으로 사육 두수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마. 수산업 실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3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수산 자원 또한 풍부하여 수산 부문의 발전에는 매우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분단이후 한국은 이와 같은 좋은 여건을 기초로 하여 어민의 소득 증대, 수산물의 수출증대 및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수산 자원의 조성 및 번식 보호를 비롯한 어업 기본 시설의 확충, 淺海 養殖 事業 및 內水面 漁業 개발, 遠洋 漁業 伸張 등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수산물의 內需 充足은 물론이거니와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다.

북한도 수산업을 식생활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보고 생산 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84년)에서 350만톤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른바 “80년대 10대 전망목표”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목표를 500만톤으로 설정하였다가 북한은 다시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에서 생산 목표를 1,100만톤으로 대폭 늘려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수산물 생산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외화 부족과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수산물은 지금까지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 대표적인 外貨獲得源이 되어 왔는데 이를 통해 심각한 외화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목표

는 북한의 생산 제도, 어업 기반, 어업 구조 등을 살펴 볼 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과장된 선전 내지 의욕에 불과하다.

1988년말 현재 남북한의 어선 보유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동력선 7만8천여척을 비롯, 총 9만9천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동력선 2만1천여척을 포함, 총 3만1천여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산물 생산량에 있어서는 1988년에 한국은 321만톤으로 지난해의 실적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기간중 異狀暖冬과 海水交換 鈍化 現象 등의 영향으로 명태, 멸치의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沿近海 漁業의 실적이 부진하였던 데다가 내수면 어업 및 양식 어업 역시 순조롭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15만톤으로서 전년보다는 다소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淺海 養殖 部門에 있어서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전년보다 6.8% 증가된 96.4만톤의 성과를 보였다. 이것은 沿近海의 수산 자원 枯渴로 어획 조건이 점차 불량해짐에 따라 북한의 수산 정책이 종래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적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산물의 제 3차 7개년 계획 목표 1,100만톤의 달성과 수산물 수출 자원화 등을 위해서는 원양 어업 및 양식 어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도 중에

제3세계 국가들과의 원양 어업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냉장 운반선을 원양 어장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소련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을 통한 양식 부문의 생산증대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어선 보유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수산물 생산 실적은 북한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명태, 정어리 등 주요 어장이 우리나라 동해 북쪽 바다에 형성되고 있는 등 한국보다 유리한 어획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북한의 “200일 출어 전투”, “300일 출어 전투” 등과 같은 勞力競爭運動에 의한 강도 높은 漁撈作業의 결과라고도 할 것이다.

<표 6>

주요 수산업 부문 현황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수 산 물 생 산 량	천톤	3,209	2,146
• 해 면 어 업	천톤	3,173	1,182
(그 중 양 식)	(천톤)	(887)	(964)
• 내수면 어업	천톤	36	105
어 선 보 유 수	천척	99.0	30.6
(그 중 동력선)	(천척)	(78.4)	(21.0)

자료: 한국은 수산청, 북한은 국토통일원

4. 광공업

가. 광공업 자원 및 에너지

지하 자원의 매장량과 분포에 있어서 북한은 한국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1936년 또는 1939년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금·은광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물자원들이 70% 이상 북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석탄과 철광은 90% 이상이나 북한에 집중 賦存되어 있다. (표7 참조)

이와 같은 지하 자원 부존상의 특징적인 여건에 기인하여 남북한의 경제 개발 전략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은 급속한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반면에 북한은 개발 초기부터 광물 자원을 주종 수출 품목으로 하여 외화 획득원의 하나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북한 역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있는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북한의 주요 광물 매장량을 비교해 보면, 석탄은 한국이 16억톤인데 비해 북한은 120억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풍부한 수자원과 더불어 북한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되고 있다.

철광석은 한국이 1억2천만톤인데 비해 북한은 30억톤 이상으로서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마그네사이

<표 7>

주요 지하자원의 부존비율

(1936년 또는 1939년)

구 분	한 국 (%)	북 한 (%)
금 · 은 광	27.3	72.7
철 광	0.1	99.9
중석, 수연광	21.5	78.5
흑 연	29.0	71.0
무 연 탄	2.3	97.7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년)

경제평론사, 한국경제 백년사, 1982, p.290 재인용

트는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65억톤 가량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광물자원에 있어서도 망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매장량이나 생산량에 있어서 북한이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다. 생산되는 原鑛의品位 또한 북한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생산성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공히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개발 광산의 深部化로 인해 품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성도 계속 저하되어 은괴를 제외하고는 매년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계획과 통제에서 오는 수직적 제도의 경직성에 주로 연유하여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高品位의 지하자원을 보유하

고 있는 까닭에 鑛種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다소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1973년 1차 석유 파동 이래 확산·강화경향을 보이고 있는 「資源 民族主義」에 대응하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원 절약적인 산업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자원의 개발·수입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공업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보면, 한국은 1988년 2,429만 5천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풍부한 매장량과 지금까지의 부단한 개발노력으로 무연탄과 유연탄을 합하여 4,070만톤을 생산, 前年對比 4.4%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철, 제강용 원료탄인 역청탄은 생산이 全無하여 남북한 공히 이를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무연탄의 절대적인 물량 부족과 함께 산업용 유연탄마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석탄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정유 시설은 한국이 현재 日産 79만배럴(연산 약 3,500만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1일 평균 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精製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소련 및 중국 원조로 건설된 “승리화학”과 “봉화화학”의 두 정유 공장에서 도합 日産 7만배럴(연산 350만톤)의 정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원유 도입의 부진에 따라 가동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의 원유 도입

실적은 1988년도에 한국이 中東諸國을 비롯한 10여개의 產油國으로부터 26,608만배럴 정도를 도입한데 비해 북한은 소련, 중국, 이란의 3개국에서 약 2,288만배럴 정도를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 북한이 한국보다 우위를 유지하여 왔던 電力도 1972년을 기해 뒤떨어지기 시작,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8년말 현재 한국의 발전 설비 용량은 1,994만4천kw로 지난해 보다 4.9%가 증대되었다. 북한도 역시 기간중 위원 및 태천 발전소의 부분 조업과 순천 화력 발전소의 확대가동 등으로 발전 설비 용량은 690만2천kw를 갖추게 됨으로써 전년비 8.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연간 발전량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년보다 15.5% 증가한 854.6억kwh를 생산하였는데 비해 북한은 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電力供給構造를 보면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의 증설과 함께 유연탄과 가스 연소용 발전소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노력으로 공급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석유 연소용 화력발전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落差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압록강과 두만강 水系를 원천으로 하여 값싼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수력발전이 전체 생산전력의 약 1/2정도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력 발전은 응기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8>

주요 에너지 현황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발전설비용량	만kw	1,994.4	690.2
(수 력)	(")	(223.6)	(405.2)
(화 력)	(")	(1,104.3)	(285.0)
(원자력)	(")	(666.6)	(-)
발 전 량	억kwh	854.6	278.9
(수 력)	(")	(35.7)	(140.7)
(화 력)	(")	(418.0)	(138.2)
(원자력)	(")	(401.0)	(-)
정 유 능력	만배럴 / 日	79	7
원유도입량	만 배 렐	26,608	2,288
석탄생산량	만 톤	2,430	4,070

자료: 한국은 동력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북한은 국토통일원

남북한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석탄 및 석유류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에너지의 주원천은 석탄으로서 총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약 7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상당량의 석탄과 全량의 원유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의 이들 자원의 가격 및 공급 동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

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으로는 범 국민적인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과 함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 전지 등 대체 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밖으로는 석유 공급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유 도입선의 多邊化 施策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또한 자원 보유국의 자원 보호주의 강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資源難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자원의 개발·공급 및 해외 자원의 개발 수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따라서 에너지의 공급 및 생산 비용 모두가 한국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에너지 산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에너지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는 “석탄은 금이다”, “석유는 피 한방울과 같다”는 등 증산 또는 절약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나 소규모의 공장기업소 및 주민들에게 저열탄인 초무연탄의 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의 수급에 있어서 북한은 1977년 이래 원유 도입이 부진하자 일부 석유 사용처를 석탄으로 대체하고 외화 획득을 위한 석탄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생산은 기존 탄광들의 채탄 조건 악화, 채탄 장비 낙후 등과 획일적인 관리·운영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력에 있어서도 북한은 수력 발전 설비의 노후로 인해 고장이 빈번하고 연중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의 갈수기와 결빙기에 가동율이 저하되고 있어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인 겨울에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총 에너지 공급 비중 가운데 신탄이 8%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多消費型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북한 경제는 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 수요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도 북한의 에너지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 공급 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석탄을 농수산물과 함께 주요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삼고 있음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석탄의 수출이 필요하고 석탄을 수출하면 에너지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 신탄 및 저열탄의 확대 사용이 불가피하고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시 투자 재원을 요구하게 되는 순환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만성적인 성장 둔화 요인 중 하나는 경제 구조의 파행성, 산업 시설 구조의 악화, 기술 수준의 낙후 등에서 오는 에너지의 낭비와 공급부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석탄을 위주로 한 에너지 생산의 증대와 소비 절약 운동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 중화학 공업

1) 철강 및 비철금속 공업

철강 공업은 그 생산과 소비량이 한 나라의 국력과 공업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 철강이 기초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철강의 수요는 많아지게 마련이다.

분단 이후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철강 생산 시설능력은 한국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973년 한국이 포항 제철 第2高爐 가동을 계기로 하여 그 위상은 바뀌어졌으며 그 이후 남북한의 철강 생산능력은 한국이 앞선 가운데 격차는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88년 기간 중 한국은 건설·자동차·전자·기계 등을 비롯, 철강 수요 산업 부문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철강재 소비량도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철강 공업은 생산 및 투자에 있어서 호조를 나타내었다.

이미 1987년 5월 연산 270만톤 규모의 광양 제철소 제1기가 완공, 기간 중에 완전 가동되었으며 1988년 7월에는 연산 284만톤 규모의 광양 제철소 제2기가 완공, 조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늘어나는 철강 수요에 대비, 철강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동일 규모

의 제3기가 건설에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철강 생산량은 크게 증가, 粗鋼 생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13.9%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호조를 보였다.

북한도 역시 김책 제철, 황해 제철 등 주요 제철 공장시설의 확장과 9월 제철소, 8호 제강소 등 中·小 공장의 신설로 철강 생산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생산량의 증가는 조업 부진으로 건설 부문내 필요한 강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전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1988년 현재 한국의 製鋼能力은 3,166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북한은 504만톤 수준으로 한국이 북한을 4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 선철 생산능력은 한국이 1,451만톤인데 비해 북한은 517만톤이고 압연강재 생산능력은 한국 2,567만톤, 북한 397만톤으로 무려 6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철광석 수급면에서는 북한의 경우 대부분 자체의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한국은 철광석을 비롯하여 古鐵 등 거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철강 공업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1988년도 철광석 생산량이 정광 기준으로 67만톤에 불과한데 비해 북한은 1,030만톤이나 생산하였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철, 제강 기술 및 생산 시스템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포항 제철을 비롯,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기술 발전을 추진해 나옴으로써, 세계 제8위의 철강대국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부상하였으나, 북한은 日政時에 건설한 기존 설비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보수와 개축만을 추진해 온 결과, 제강 능력이 선철 생산능력 보다 저조한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현재의 시설로는 범용 강철을 제외한 고급 제품 생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철금속 공업의 생산능력을 보면, 1988년 현재 북한은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鉛 8.8 만톤, 아연 29.5 만톤, 銅 9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종래 제련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소련으로부터 기술 및 시설을 지원 받아 1985년 3월 평안남도 북창에 연산 2만톤 능력의 알루미늄 공장을 건설,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 중화학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非鐵金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온산 지역에 대규모의 비철금속 단지를 조성,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1988년도 현재 鉛 13.0만톤, 아연 24.7만톤, 銅 20.0만톤, 알루미늄 1.8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비철금속 부문의 생산능력에 있어서는 그 우열이 서로 교차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를 감안하여 보면 북한의 시설 능력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군수 산업을 위주로 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북한의 지속적인 정책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철금속 공업이 소재 산업으로서

관계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고 특히 전기, 전자 및 기계 공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균형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은 비철금속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표 10>

철강 및 비철금속 생산능력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선	철	만	톤	1,451		517	
제	강	만	톤	2,166		504	
압	연 강 재	만	톤	2,567		397	
	연	만	톤	13.0		8.8	
아	연	만	톤	24.7		29.5	
	동	만	톤	20.0		9.0	
알	루 미 늄	만	톤	1.8		2.0	

자료 : 한국은 상공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2) 기계 공업

기계 공업은 북한이 일찍부터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가장 역점을 두고 개발해 온 부문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있어서도 1970년 이후 한국의 중화학 공업의 중점적인 개발과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등 운송용 기계와 방직 기계, 전기 기기 및 전자 통신 장비, 정밀 기계 등에서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돌입함으로써 북한과는 비교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기계 공업 발전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요가 적은 대형 기계들까지도 자체 생산에 주력하는 등 對內指向的 戰略을 구사하여 온 데 비해, 한국은 對外指向的 경제 발전 모형에 입각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기계 공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군수 산업의 개발을 위해 聯關 産業인 공작기계 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으나 한국은 대형 장비나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 대신 투하된 비용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만을 선별적으로 생산, 특화하였기 때문이다.

1988년 현재 주요 기계 제품의 생산능력을 살펴 보면 다음 <표 11> 과 같다.

특히 최근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생산·기술·수출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산업구조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공업 부문이 되고 있다. 1988년의 생산능력은 소형 승용차로부터 버스·트럭 등에 이르기까지 총 170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 전년 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多種多樣한 車種으로 소득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국내 수요의 충족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양을 수출

<표 11>

주요 기계제품 생산능력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자 동 차	만 대	170	2
조 선	만톤 (G/T)	300	21
공 작 기 계	만 대	5.5	3
트 랙 터 (트랙터, 경운기)	만 대	20	3

자료 : 한국은 상공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자동차 공업은 陸路 輸送體系의 未發達과 더불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평남 덕천에 위치한 승리 자동차 종합 공장에서 화물 자동차와 꺾차 등 연산 2만대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승용차 및 대형 운송용 차량, 그리고 특수 중장비 차량 등은 소련, 체코, 일본 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에 와서 자동차 공업 발전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造船 部門에 있어서는 1988년 현재 한국은 연간 300만톤의 建造 能力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연간 21만톤 정도를 생

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규격화된 화물선과 냉동 운반선을 내수용으로 건조하는데 불과한 영세성을 띠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最大船 建造實績 역시 한국은 26만톤급인데 비해 북한은 2만톤급 수준으로 조선 기술 수준도 비교가 안될 만큼 차이가 크다.

공작기계 생산능력은 한국이 각종 旋盤, 터닝 盤 등 연간 5.5만 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컴퓨터가 장치된 數值 制御 旋盤 (C. N. C)을 비롯한 최신 공작기계들을 수출하여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汎用 공작기계류의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能力은 연간 3만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제품의 질 역시 기술 부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컴퓨터 산업이 그 동안에 축적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각종의 산업용·사무용 기계 및 기기도 최신형의 자동화 기종으로 개발·보급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축적된 기술이 빈약하여 컴퓨터 산업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 기계의 경우 한국은 기업의 새로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능력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도 역시 생산능력이 전년 수준에 그쳤으며 생산공급도 부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88년 기간 중 보유 농기계의 수리 및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 및 조달에 주력하였다.

3) 화학 공업 및 건재 공업

화학 공업은 고도의 기술과 정보를 활용, 비교적 소규모의 시설로 高附加價値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산업 부문으로서 각종의 석유 화학 제품을 비롯, 의약, 농약, 화장품, 염료, 도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기초 과학·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고도의 기술 개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해방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의 화학 공업은 금속 및 기계 공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이 비교가 안될 만큼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연산 48만톤 규모의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중요한 화학 공장들이 있었으나, 한국은 1950년대까지 화학 비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59년 충주 비료 공장의 건설로 化學肥料自給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 제7 비료공장까지 건설, 가동되는 등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對內 需要의 充足은 물론 해외로 상당량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현재 남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실량 기준으로는 한국은 370만톤, 북한은 351만톤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성분, 함량 기준으로는 약 2배의 생산능력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高成分의 複合肥料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토양 및 농작물 생육에 알맞는 多種多樣한 화학 비료가 개발·보급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성분 함량이 낮은

硫酸 肥料, 磷肥料 등 單一性分の 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연유한다.

농약 생산에 있어서는 1988년 현재 한국은 약 300여종의 농약을 실량 기준으로 연간 68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3만톤 수준에 불과하고 그 종류 또한 극히 적으며 따라서 많은 양의 농약을 일본, 소련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의 주요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보면, 한국은 국제 원유 가격의 安定과 前·後方 관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합성수지의 국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LDPE, HDPE, PS, ABS, PVC 등을 비롯한 주요 합성수지의 생산시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1988년 현재 한국의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5대 汎用 수지만하더라도 연간 242만톤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화학 공업의 발달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이 허약하여 지금까지도 합성수지의 생산능력은 연산 15만톤에 불과하며, 생산제품의 종류와 품질 면에서도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조로우며 저급한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공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경공업 제품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학 공업, 특히 합성수지 생산에 주력하지 않는 이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건축 자재용 판유리의 경우에도 한국은 연산 1,195만 상자의 생산능력을 보유, 늘어나는 건재 소유에 따라 전년보다 29.9%로 대

폭 확장되는 신장세를 보였는데 비해 북한은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300만 상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쳐, 한국과는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아직까지 판유리 수요의 상당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1988년 기간 중에는 평양 축전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각종 체육·문화 시설의 건설, 평양 시가지 정비, 주택 건설 등 건설 부문의 판유리 수요 급증으로 북한의 판유리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한 공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는 1988년 현재 한국이 3,046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국내 건설과 해외 건설 현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북한 역시 연간 977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일부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耐火物의 생산원료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그네샤 크링카의 생산능력은 마그네사이트가 북한 지역에 다량으로 편중 부존되어 있어 한국보다 월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1988년 현재 26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자체 수요의 충당은 물론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연산 5만톤의 능력에 불과하여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밖에 의약품 및 화장품, 합성 고무, 화학 섬유 등의 화학 제품과 기타 건설 자재의 생산 공급 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은 그 개발 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이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있다.

<표 12> 주요 화학·건재공업 생산능력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화 학 비 료	만 톤	370	351
농 약	만 톤	68	3
주 요 합 성 수 지	만 톤	242	15
판 유 리	만상자	1,195	300
시 멘 트	만 톤	3,046	977
마 그 네 샤 크 링 카	만 톤	5	260

자료 : 한국은 상공부, 농약공업협회, 북한은 국토통일원

다. 경공업 부문 및 소비재 공업

경공업은 대부분의 제품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활필수품, 즉 소비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한 만큼,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 경공업 제품의 생산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 수요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업자들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중요시 하여 생산·공급하게 되며, 정부 당국도 경공업

부문에 대해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은 수요와 공급이 중앙 계획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단·선택·결정되어지는 일종의 공급 독점 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기는 극히 어렵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소비 활동은 자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는 무관하게 중앙 당국의 일방적인 공급 계획에 좌우됨으로써 資本主義 市場 經濟와 같이 특정 재화에 대한 個別的인 選好란 성립되지 아니 한다.

한국은 당초부터 경공업 발전을 토대로 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경공업의 기반은 튼튼하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힘입어 생산되는 경공업 제품이 현대화·고급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需給 면에서도 對內 需要의 충족은 물론이거니와 생산 제품의 國際 競爭力 強化로 세계 시장에서 好評을 받는 가운데 輸出量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앞세워 군수 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만 몰두하여 왔다. 다시 말해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극도로 투자를 억제시키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경공업 부문이 한국과는 비교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더우기 북한 경공업 부문의 낙후는 생활 필수품의 공급 부족 현상을 지속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 의욕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合營法」 발표와 때를 같이 하여 1984년 이후 이른바 「8·3 인민 소비품」 생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경공업 혁명”, “인민 봉사 혁명” 등의 구호 아래 경공업 제품의 증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기간 중에는 정무원의 조직 가운데 “화학 및 경공업 위원회”를 “경공업 위원회”와 “화학 공업부”로 분리·개편(’88. 6. 2) 하는 등 경공업 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종래보다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공업 부문에 대한 신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8·3 인민 소비품」의 증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 인민 소비품」이란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에 生必品 職場 및 家內 作業班을 설치하도록 하고 당해 공장 및 기업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설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주민 소비품을 총 망라하여 지칭한다.)

따라서 1988년 현재 남북한의 경공업 부문 격차는 생산면에서나 품질면에서나 모두 심화되어 있다. 家電 製品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은 당초 輸入對替 産業 部門의 하나로 개발·육성하기 시작하였으나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동시에 기술 집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수출 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은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생산 규모나 기술 수준이 아주 낙후하고 對內 需要조차도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은 TV

수상기 생산능력이 칼라 TV만 하더라도 1,271 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흑백 TV도 수출용으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냉장고는 연간 40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 電氣, 電子 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각종 家電 製品들이 다양하게 생산되어지고 있다. 질적 수준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크게 신장되어 이제는 주종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79년에야 비로소 흑백 TV를 연간 10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TV 수상기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여타의 TV 조립 공장의 시설 능력까지 합해도 연간 24만대 정도의 생산능력 밖에는 없다. 칼라 TV는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냉장고 역시 최근에야 냉동실과 냉장실을 갖춘 제품이 생산되고 있을 뿐이다.

그밖의 경공업 제품 내지 각종 소비재들에 있어서도 북한의 생산능력이나 기술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남북한의 생산 격차는 비교의 여지가 없을 정도를 심화되어 있다.

남북한의 주요 경공업 제품 생산 시설 능력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3> 과 같다.

<표 13>

주요 경공업제품 및 소비재 시설능력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TV	수 상 기	만 대	1,271	24
냉	장 고	만 대	405	12.6
섬	유	만 톤	135	12.0
직	물	억m	70	6.6
신	발	백만족	600	62
손	목 시 계	만 개	4,000	10

자료 : 한국은 상공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라. 기술 수준

전반적인 기술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은 개방 체제에 의한 선진 기술과 설비의 도입으로 급속한 기술 진보가 이룩되었고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최첨단 산업이 토착 기반을 구축, 발달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축적 기술 기반이 없는 가운데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자체의 기술 개발에만 의존하는 폐쇄 체제를 고수하여 왔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의 공업 중 가장 발달되어 있는 기계 공업 부문의 기술 수준만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용 기계 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콘크리트믹서, 벽돌제조기 등의 산업 기술은 이미 국제수준에 달한지 오래이고 高濃度 청정기, 淨水機 등은 수출단계에 있다. 북한은 범용 공작기계에 한하여 量産體制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板金部門은 소련, 체코 등지에서 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농업용 기계 분야의 경우 한국에서는 動力 噴霧器, 動力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가 대부분 국산화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트랙터와 기타 연결 농기계를 20여종 생산하고 있으나 베어링 등 일부 부품은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째, 한국은 수송용 기계 분야, 그중에서도 자동차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생산기술이 우수하며 성능면에서도 단연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대형 공장 기계와 채굴 기계 등 장비 생산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나마도 베어링, 집화기 등 주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전기·전자기계도 한국이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북한은 발전용 기계 부문에서 다소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 낙후에 대한 몇가지 원인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기술이 개발,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를테면 市場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여야 하

는데 북한은 제도적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체제상 사회적 요구는 중앙 당국의 요구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 요구가 북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술 개발의 목표를 「절대성」, 「무조건성」 원칙에 입각하여 달성하여야 한다는 강요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여 요구하는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바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령 북한 중앙 당국의 요구가 사회적 요구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경제 기반 때문에 요구하는 기술 개발을 반드시 실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개발이란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수준의 향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이 기술과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연유한다.

세째로 오늘날의 기술은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성격을 외면함으로써 기술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의 자력갱생을 앞세운 폐쇄 체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을 속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관련 정보를 도입하여 북한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기 보다는 소련 및 일부 동구제국의 기술 지원과 對內的 자체적인 기술 개선에 만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 남북한간의 기술 격차를 확대시킨 것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은 對外 交流·協力を 통한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직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5. 수송·통신

오늘날의 수송 수단은 철도를 비롯하여 고속 도로, 해운, 항공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철도는 화물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8년 현재 한국의 철도 총연장은 6,456여km이며, 이중 電鐵化 區間은 1,277여km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철도 총연장 4,927km중 61%인 2,996km가 전철화되어 있다.

연도중 철도 건설 실적을 보면 한국은 장성~송정리, 금정~원곡, 제천~영주 등 구간 공사의 완공개통으로 철도 연장이 전년비 1.8%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북한은 북부 내륙 철도 1단계 구간(양강도 혜산~자강도 만포)을 비롯한 총 6개 노선의 신규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철도 총연장은 전년비 3.2%의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은 철도 전기화 및 重量化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 電鐵 延長이 비교적 크게 확대 되었으며 8軸 기관차 및 중량 화차의 생산을 개시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도로 수송에 있어서는 한국은 1988년 현재 도로 총연장이 약 5만6천km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550km가 고속 도로로 되어

있어 명실공히 한국 전지역은 1일 생활권화 되었다. 또한 도로 포장률은 61.4%로서 전년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장 도로 연장은 1980년에 비해 2.2배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자동차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힘입어 전년보다 26.3%가 증가한 203만 5천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도로 수송 기반이 발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철도 수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도로 총연장이 2만3천여km이며, 고속도로는 평양~원산간 172km, 평양~남포간 53km, 평양~순안간 15km를 합해 240km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의 자동차 운행 대수는 화물 자동차와 버스를 중심으로 총 24만8천대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평야 지대인 서북 지역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 연도중 북한은 「평양 축전」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버스와 화물차량을 3,000대 가량 수입하였으며 백두산 지역 답사 도로, 평양~개성, 원산~금강산간 고속 도로 등 주로 정치적 또는 관광 유치 목적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지세, 에너지 및 財源 不足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도로 수송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수송 실적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부진상을 면치 못하였다.

해운의 경우 한국은 대외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1988년 현재 港灣 荷役 能力은 17,077만톤으로 전년보다 11.9%가 증대되었고, 외항선 보유 톤수는 829.7천톤에

이르렀으며 自國船 積取率은 輸出·入 物量의 급격한 증가로 전년보다 2%정도 떨어진 37.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북한은 종래 대외 무역에 소극적이었는데다가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는 탓으로 해운 부문이 극히 낙후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야 북한도 對外 貿易 強化 政策을 추구하면서 해운과 항만 시설을 정리, 보강하고 있다. 북한은 1988년 기간 중에 사리원市 길성포 부두를 완공하였으며 나진 낙도港에 기중기를 제작·설치하였다. 선박은 화물선 1척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4척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현재 북한의 항만 하역 능력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된 3,490만톤을 나타냈으며 외항선 보유 톤수도 57만톤 수준으로 해운 능력이 다소 신장되었으나 자국선 적취율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항공 수송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6개국 26개 도시에 41개 노선을 개설, 136대의 항공기를 운항시키고 있고 그 신장세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週 1~2회의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동 베를린, 평양~하바로프스크 등 3개국, 4개 도시의 국제 노선 밖에는 운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객기는 17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 수송 구조의 차이는 이상에서 언급한 수송 시설 능력의 차이로부터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여객 수송과 화물 수송이 함께 발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여객 수송보다 화물 수송에 치중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여객 수송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은 곧 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북한의 社會的 移動性 (Social Mobility) 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화물 수송의 경우 한국은 균형적인 수송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철도 편중의 수송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1988년 현재 철도, 도로, 해운 및 항공 수송의 분담율이 각각 34.3%, 22.1%, 42.6%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의 수송 분담율은 철도 86%, 도로 12%, 해운 2%로서 철도에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더우기 북한은 鐵道 偏重의 수송 구조를 개선시켜 당면한 수송 애로를 극복하기 보다는 철도의 電氣化·重量化 施策에만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의 불균형적인 수송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북한은 폐쇄 체제의 고수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1988년 중 한국의 우편물 접수량은 18억 5천 9백만통에 달해 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증대 일로에 있으나, 북한은 당국의 우편 검열과 통제가 심하여 대내 주민들조차 우편 교류에 많은 제약과 받고 있다. 또한 통신 시설을 보면, 한국의 전화 회선수가 1,124만 회선으로서 지난해 보다 무려 10.0%나 크게 증

가하였고 이에 따라 100인당 전화 보급률은 전년도의 29대에서 33대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비해 북한은 약 30만회선 정도가 가설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3~4만 회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 교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연도 중 「국제 통신 센터」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인터스프트닉」 위성, 평양~서독간 위성전화 회선을 개설 하는 등 국제 통신망의 확장에는 주력하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평양 축전」의 준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는 최근 북한의 「수출 강화 정책」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수송 · 통신 현황

(1988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철 도 총 연 장	km	6,456	4,927
(전 철 화 구 간)	(km)	(1,277)	(2,996)
객 차	량	2,158	900
화 차	량	15,311	21,900
지 하 철	km	149.7	30.5
도 로 총 연 장	km	55,778	23,000
(고 속 도 로)	(km)	(1,550)	(240)
자 동 차 보 유 대 수	만 대	203.5	24.8
항 만 하 역 능 력	만 톤	17,077	3,490
외 항 선 보 유	만톤(G/T)	829.7	57
자 국 선 적 취 율	%	37.9	20
항 공 기 보 유	대	136	17
국 제 항 공 노 선	노선(개국)	41(16)	3(4)
우 편 물 접 수 량	백만통	1,859	-
전 화 회 선 수	만회선	1,124	30

자료 : 한국은 교통부, 건설부, 체신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6. 대외 거래

가. 무역 규모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국내 자본의 부족을 외화로 충당하고 협소한 국내 시장의 제약을 해외 시장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대외 지향적 개발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개발 전략의 추진은 빈약한 부존자원의 여건하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생산 자원화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대외 지향적 개발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무역 규모가 급속히 신장되었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치 아래 폐쇄적인 아우타르기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외 거래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외 거래는 어디까지나 자급 자족형 경제에 종속된 하나의 보완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이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국가 관리」에 의한 계획 무역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무역부 산하의 국영 상사와 협동 무역 상사 등을 통해 대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 대상국에 있어서도 경제를 정치 목적과 결부시켜 60년대에는 공산권 제국과의 무역 비중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었고, 「제3세계」로 일컬어지는 비동맹 국가들

이 그 다음이었으며 서방권 국가들과의 무역은 별로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무역 정책은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투자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자체적 기술 개발이 한계에 이르자 1971년~76년의 6개년 경제 계획 기간 중 「기술 혁명」을 최고의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진 설비 및 기술의 도입과 투자 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기술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대서방 교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 정책의 변화는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되었던 서방 선진국의 무역 시장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북한의 對西方 貿易 規模를 일시적이거나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대서방 무역 증대, 특히 수출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資本 및 設備 導入은 결과적으로 對外 負債의 累増과 償還 不能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킴으로써 최근까지도 대서방 교역의 가장 큰 골치꺼리로 남아 있다.

요컨대 1970~1979년 기간 중에 북한의 연평균 수출 및 수입 성장율은 각각 13.6%, 11.4%로 한국의 37.5%와 28.7%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합영법」(1984)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은 무역 증대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수출입은 규모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어 북한 무역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1988년 중 한국의 수출입 실적은 수출 607억달러, 수입 518억1천만달러로서 전년도에 이어 무역 흑자를 기록, 경제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연도 중 원화의 평가 절상, 노사 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과 임금 인상, 원자재 수급 애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 등 어려운 국내외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前年對比 28.4%의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냈으며 사상 처음으로 134억달러가 넘는 연간 수출 규모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급속한 기술 진보와 함께 국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경제 기반위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附加 價値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인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수입 역시 수입 자유화의 지속적 추진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증가로 前年對比 26.3%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같은 기간 중 수출이 19.9억달러, 수입이 31.6억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17.0%, 20.9%의 신장율을 나타냄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높은 무역액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수입의 신장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제13차 「평양 축전」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평양의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機資材의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외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역 증대는 무역 총액이 비슷한 1970년초 한국 무역의 신장세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취약한 대외 경쟁력과 신용의 실추에서 오는 「국제 경제에서의 고립」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88년 현재 국민 총생산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도 41.3%, 수입 의존도 34.1%로 무역 의존도는 75.4%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수출 의존도 9.7%, 수입 의존도 15.3%로 무역 의존도는 25.0%를 나타내 한국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해외 의존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人口 過多, 資源 貧困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대외 지향적 개발 전략이 물고 온 불가피한 귀결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거나 보호 무역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표 15 >

남북한 수출입 추이

(통관기준, 억미불)

구분 년도	한 국			북 한		
	수출액	수입액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액
1970	8.4	19.8	28.2	3.7	4.4	8.1
1975	50.8	72.7	123.5	8.1	10.9	19.0
1980	175.0	222.9	397.9	14.4	17.4	31.8
1981	212.5	261.3	473.8	13.0	16.0	29.0
1982	218.5	242.5	461.0	15.0	18.0	33.0
1983	244.4	261.9	506.5	13.8	15.5	29.3
1984	292.4	306.3	598.7	13.4	13.9	27.3
1985	302.8	311.4	614.2	13.5	17.2	30.7
1986	347.1	315.8	662.9	14.9	21.1	36.0
1987	472.8	410.2	883.0	16.7	24.0	40.7
1988	607.0	518.1	1,125.1	19.9	31.6	51.5

자료 : 한국은 관세청, 북한은 국토통일원

나. 무역 구조

수출 상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 개발 계획이 착수되기 이전인 1961년까지만 하여도 1차 상품의 수출이 82

%나 차지하였으며 공산품의 수출은 18%에 불과하였다. 그 후 공업화가 활발히 진척됨에 따라 공산품의 수출은 급속도로 늘어나 1970년에는 총 수출액 가운데 83.6%를 차지하게 되었고 1980년에는 92.3%를 점하여 명실공히 공업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제는 附加 價値가 높은 공산품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1988년 현재 한국 수출 상품의 산업별 구성은 공산품이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농수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 공산품의 대종은 섬유 제품, 선박, 자동차, 전자 제품, 신발류, 기계류, 철강 제품 등이다.

북한의 수출은 당초 철광석, 비철금속 광물 등 1차 산품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 半製品 수출의 확대 과정을 거친 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完製品 수출의 증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 구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 중 광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1차 산물이 아직까지도 35~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련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수출 상품이 금속 및 철강 제품과 각종 원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석탄, 시멘트 등으로서 광물 자원 및 1차 가공품이 대종을 이루고 그 외에 농수산물, 섬유류가 일부였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히 부존 자원이 풍부하지 못함으로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입 구성비에 있어서

는 경제규모와 산업 구조의 차이로 남북한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수입 상품은 1988년에 자본재 36.7%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수출용 또는 내수용 원자재와 연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경우에는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와 그 외에 전기 제품 및 일용 잡화, 화학 제품, 금속 제품 등의 완제품이 수입액 총액 중 약 6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산물과 광산물, 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수출입 상품 구조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원자재의 수출 비중과 완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후진적인 수출입 상품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지역별 무역 구조를 보면 한국은 무역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무역 시장의 多邊化 政策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세계의 170여 개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종래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었던 시장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1988년 기간 중에 한국은 소련, 중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의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헝가리, 폴란드, 유고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무역 사무소 교환 개설이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경제 교류 및 협력 시대의 새로운 場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對北韓 특별 선언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문제도 민족 공동의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그 방안을 모

색,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힘을 기울였다.

북한은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와 교역 관계를 갖고 있는데 불과하며 무역 총액에 대한 對象 地域別 比重은 1963년까지만 해도 공산권 제국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 서방권과의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대서방권 무역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1974년에는 이 圈域에 대한 무역 비중이 53.6%로 한 때나마 공산권 무역 비중을 능가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방권과의 무역 확대는 수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기술 혁명」을 위한 자본재 수입의 확대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외채 누증의 문제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외환 부족으로 인한 외채 상환 불능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 1988년에 북한의 총무역액 중 공산권 무역비중이 68.0%로 전 년도의 66.1%보다 증가되고 있는 것도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신용 문제를 들어 제3국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북한과의 교역을 기피한데 연유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무역은 소련, 중국, 일본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3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지금까지 총 80~8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에 대한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 주민의 생활 수준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의 공급 및 소비 형태, 가격 결정 체계, 경제 의식 등이 남북한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자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계획, 지시, 명령 등에 의하여 逐次的 (recursive) 으로 공급량이 결정되어진다. 가격 결정 역시 한국은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만 북한은 소수의 의사 결정자들이 소비자들의 選好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 의식도 한국이 적극적이며 자율적이라면 북한은 소극적이며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이질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비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주민에 대한 경제 선동에 급급한 나머지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일부 단편적인 통계조차도 과장되어 있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의 선전에 그치고 있어서 비교에 더욱 큰 제약이 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한 1인당 GNP에서 再生産을 위해 필요한 투자의 부담과 군사비의 지출액을 차감한 잔여분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후생을 위해 소비되어질 수 있는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로 정의하고 남북한 주민 생활의 개략적인 윤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비교한 바와 같이 1988년도 한국의 1인당 GNP는 4,040달러이며, 북한은 980달러로서 한국이 북한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 있다. GNP에 대한 군사비 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4.6%, 북한은 21.5%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남북한의 총투자율은 한국이 29.9%, 북한이 약 30% 수준으로 모두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정의한 바와 같이 1인당 GNP에서 1인당 투자액과 군사비 부담액을 차감한 것을 1인당 최대 소비 능력으로 본다면 한국은 可用 民間 消費 支出의 비율이 65.5%를 점하고 있으므로 可用한 소비 수준은 1인당 2,646달러로 나타나는데 비해 북한은 주민의 최대 소비 비율이 약 48.5%로서 475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진다.

여기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가용한 소비 수준은 약 5.6:1의 현저한 격차를 보여 주고 있어 1인당 GNP의 격차보다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북한의 소비 수준은 비록 단순 계산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기의 주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 주는 대리 변수 (Proxy Variable)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주민 생활 수준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 구조에 있어서 남북한은 다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득 증가와 상응하여 식품비를 비롯한 기본 생활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교육, 교양, 보건비 등 문화비의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점차 선진국형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물질 생활의 풍부함과 무분별한 소비 심리에 따라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공급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可用 所得을 가지고도 기본 소비품조차 구매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이 현금보다는 實物을 더 選好한다는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되어진다.

한마디로 북한은 강요된 過少 消費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주민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생산의 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1984년 현재 사무원을 기준으로 조사된 북한 주민의 명목적인 가계 지출 구조를 보면 주·부식비 21.1%, 피복비 22.6%, 광열비 3.0%, 교육비 2.7%, 문화·위생비 10.1%, 공과금 1.0% (나머지는 예비 및 저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의 한국과 비교하여 보면, 식료품비는 북한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되어 있고 피복비는 북한이 월등히 높은 반면 문화비 지출 구성비는 한국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소비 생활 구조가 통념상 이해하기 곤란한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가격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은 식량이나 기초생활필품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비하여, 그 이외의 재화(“예”, 육류, 양복, 가공식품 등)는 高價政策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복비의 구성비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북한 주민의 衣生活의 고급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배급품 이외의 의복류가 高價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 문화비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가 시간이 적고 위락 및 문화 시설이 빈약함에 따라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기인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소비 생활은 한국이 소득 수준에 비해 過多消費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북한은 특히 생필품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非自發的으로 過少消費하는 대조적인 생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V. 요약과 결론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는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그 격차는 시간과 더불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경제 성장의 「南高北低」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근본적으로 상호 다른 경제 이념과 체제의 틀속에서 顯示的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한국이 시장과 자유 경쟁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자율적·다원적인 경제 질서를 형성, 발전시켜 왔는데 반해 북한은 중앙 집권적 계획과 통제라는 인위적·획일적인 조작에 의해 경제가 운영, 관리되어 온 것이 오늘날과 같은 생산력의 격차를 빚어 낸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보아도 쉽게 확인되어진다.

첫째, 개발 초기 북한이 한국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공업화 조건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지르는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를 줄이고 또 자율적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발달함에 따라 계속 생산성은 향상되어 온데 반해 북한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를 고수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북한이 최근 低成長의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개방화의 움

직임을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종래 고수하여 왔던 自己完結的인 아우타르키 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넷째, 정치·이념적 自家撞着에 빠져 북한이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물질적 유인(Material Incentive)의 폭을 소폭적으로나마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생산력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투자 및 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하나의 독점적인 공급 경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의 투자 및 소비 지출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북한의 국내 투자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연간 투자의 절대적 규모는 한국에 비해 북한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더우기 북한은 투자 가치와 그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이 당과 정권 기관에 의해 유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북한은 모호한 가치 결정 기준에서 오는 심한 투자의 낭비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각종 시장 정보를 통해 평가된 투자 수익률에 입각하여 투자가 합리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북한은 畸形的인 공급 경제인 만큼 소비 억제가 직접적으로 일반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過少消費의 강요에 따른 주민 불만의 누적 현

상을 정치·사상적 유인(Moral Incentive)에만 의존, 해결하려고 주력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화 되어 버린 북한의 경제 침체로 장래에 대한 주민의 기대 심리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반비례하여 주민의 현실적 불만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건전한 소비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 성향의 왜곡은 나아가 경제 전반의 왜곡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모두 부양 인구가 많은 반면 부존된 자원은 빈약한 실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의 급신장과 더불어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취약성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수출입을 다변화함으로써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부가 가치가 높은 情報 産業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무역 의존도가 매우 낮은 경제이다. 북한은 석탄을 비롯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 주종 수출

품으로서 이들은 선진 기술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주요 外貨 獲得源이 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북한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 상품들 대부분은 북한이 풍부하게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도 역시 대내적으로 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외화 획득을 위해 도리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북한은 주민 생활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욕구 불만을 분출할 수 없는 주민들의 생산 의욕이 떨어짐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지향적인 민족경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민족 경제의 발전 속도가 북한 지역 경제의 저성장에 기인하여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은 대내적으로 과감한 경제 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거니와 한국의 진정한 경제 교류와 협력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 한국 역시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8년도 기준)

1989년 12월 15일 인쇄

1989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720-2426, 2143

책임집필 : 홍 성 국

인쇄처 : 문 성 경 인 (주)

국통조 89-12-126

〈비매품〉

